

기록의 역사 (이승일, 해안, 2011)

주 순 덕*

우리나라 학계에서 기록과학 내지 기록학이라는 영역이 정립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를 전후하여 그 태동이 있었다고 본다면 현재까지 그 역사는 10년을 조금 넘겼을 뿐이다. 물론 우리의 유구한 역사전통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기록의 보존을 생각한다면 앞선 발언이 성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대적 기록관리체계라는 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발표된 기록학 관련 논문들에는 대체로 우리의 기록관리체제의 부실함과 그에 대한 관심의 소홀이 지적되어 있다.¹⁾ 1996년 말, 기록관리의 문제가 우리 학계의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1999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록연구사들이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되며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가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변화와 발전을 거듭

*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1) 김익한, 「기록관리체제의 개혁과 기록과학의 과제」, 『정신문화연구』 1999년 여름호(통권 75);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의 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역사비평』 1997년 봄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의 현실과 미래』, 1994. 4; 이만열, 「국가기록관리의 현실」 등을 참조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후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의 기록관리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기록관리의 혁신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짧은 시간에 법률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록관리의 체계를 정비하였고, 또 기록 환경의 변화—종이기록 위주에서 전자적 환경으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긍정할 만한 부분이 많기는 하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 또한 산적해 있어 한 고비쯤은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해야 할 때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고민은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²⁾ 외국의 기록관리의 사례를 연구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용할 표준이나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필요도 제기되었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영역에 관심과 사명을 가진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안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들³⁾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그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연혁을 잘 정리한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이승일 선생의 『기록의 역사: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이다.

2) 김규한·장보성·이현정,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호, 2009년을 보면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편중성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기록관리학계가 균형을 잡기 위한 좋은 단초가 되어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 주목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논문으로는 장로사·김유승,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0권 제1호, 2009도 있으나, 이는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동향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남태우·이진영,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도 참고할 만하다.

3) 필자의 소견이 짧은 탓에 지금까지의 학계의 정황을 정리하고 그 맥락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논문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으며, 이런 방면에 참고한 논문으로는 이영학,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1호, 2007 ;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등이 있었다. 많은 글들이 서론에서 이러한 필요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으나 그간의 기록학계를 정리하고 쟁표를 짚었다고 할 만한 글은 만나지 못했다.

저자는 서문에 해당하는 ‘한국적 기록관리학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의 전반적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가 써온 일련의 논문들⁴⁾을 엮어 하나의 큰 줄기를 이뤄 그 해답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록관리법의 제정이 과거 한국 국가기록관리 제도와 관행에 대한 반성이었음에도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느껴 집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여 기록학에 뛰어든 저자의 역량이 잘 드러난 의문과 저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리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조사를 수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1948년 한국정부 수립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한국의 독자적인 기록관리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1부와, 한국의 주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사와 그 활동을 분석한 2부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의 장점은 1948년부터 현재(2011)까지의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의 수행과정의 통시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archives가 어떻게 생산되고 선별, 보존되었는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필자의 의도가 정부기관 혹은 사무관리규정 내지 기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archives라는 한에서 잘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기록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

4)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7 ;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68-197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2008 ;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2008 ;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을 말한다.

아 의문의 여지는 있다. 예건대, 제1부 제1장에서는 1950년대의 기록관리 부분에 있어 식민지적 사무관리제도가 정부에 존속하고 있었음에 반해 육군에서는 미국식 사무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미국식 기록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당시 제정된 「공문서규정」이나 「정부처무규정」 등이 조선총독부의 사무관리제도를 활용한 것이긴 하나 이 외의 규정에 관한 고찰이 없어 자칫 편향적인 시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주류로 보여지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특징적인 면을 파악하며 시대별 한계들을 지적하여 큰 틀을 형성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2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부분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의 역사적 연원과 근거법을 잘 분석하고 있어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학계에서 민간차원의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최근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기록물 내지 국가기록을 대상으로 한 관리가 기록관리의 주가 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고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면에서 이승일 선생의 책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각 시대별로 특징과 한계를 잘 정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다음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1996년 ‘한국의 역사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찌보면 기록학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심포지움이 개최된 이래, 공공기록을 담당하는 정부기록보존소의 변화와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제 개혁이 지속되어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필요 앞에서 이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의 체계가 정립되리라 생각한다. 즉 체제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함에 있어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참고하고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제가 더욱 정비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시대의 기록관리의 사명을 띤 이 땅의 아키비스트들이

지나온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의 역사를 자각하고 현실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이 참고가 되어주리라 생각해 본다.